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원규



우리 시대의 농촌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니다. 고향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나서 자란 곳' 혹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이니, 말 그대로 농경사회였던 우리의 고향은 대개 농촌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서의 농촌은 급격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눈빛과 피부색이 다른 이국의 여인들과 그의 2세들이 장터에 나와 국밥을 먹는다. 가난의 대물림이 국경을 넘어 우리 고향의 빈자리를 소외와 반인권으로 메우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사이 환구나 뜰개는 애완견들로 대체됐다. 도시의 자식들이 키우다가 늙고 병들자 고향으로 보내온 애완견들이 마을 마을을 누비고 다닌다. 고향의 부모님들이 국적도 알 수 없는 불우한 애완견들의 보모이자 호스피스가 된 것이다.

WTO나 FTA 문제 등으로 농촌과 농업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극단적인 위기의식의 한 현상일 뿐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농촌과 농업은 회복 불가능의 빈사 상태에 놓여있었다. 도대체 당대에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

는 농가 부채문제가 그러하고, 1년에 어린 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유령의 마을'이 확산되다보니 단 만위마다 '하나의 초등학교', '하나의 중학교'마저 폐교될 정도로 되었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사이 농촌문제의 해결은커녕 부채만 늘어나고, 급기야 유권자 수에 있어서도 열세에 몰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말았다. 정치적 소외는 결국 경제적인 공황상태를 불러왔으며, 절망적인 농촌사회의 문화적 병리현상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읍내에 나가보면 온통 소비향락적인 것들이 판을 친다. 어느새 '문화는 곧 소비와 향락'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도시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특히 결혼 적령기 남녀 성의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보니 건설한 농촌 총각들에게도 이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농촌이 갈수록 '유령의 마을'로 변해가

는 이유는 결국 젊은 여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총각들 중에는 기업을 이어 농촌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도대체 눈을 찡고 보아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들 떠나고 한번 떠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 총각들은 결혼은 고사하고 예전처럼 변변한 연애 한번 할 수 없으며, 결국 읍내의 밤거리를 절망적인 포즈로 거웃거릴 수밖에 없다.

급기야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텅 비어 버린 농촌에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오기

뿐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들이거나 통일교 등 종교 문제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순혈주의를 미덕으로 삼아온 농촌의 유교적 정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신부- 후불제 가능'이라는 어느 농촌의 현수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경제적 노예-성적 파트너'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농촌 총각의 '억지 결혼'은 결국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문제와 코시안 등 혼혈 2세의 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뉘튼게나마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는 농촌 총각이나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전체의 문제다.

사단은 이미 벌어지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 우선 인종차별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편견을 수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쩌다 우리의 농촌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1세기 '슬픈 세계화'의 고향 풍경이 가슴을 친다.

(시인·지리산학교 교사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의 슬픈 세계화

제의 해결은커녕 부채만 늘어나고, 급기야 유권자 수에 있어서도 열세에 몰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말았다. 정치적 소외는 결국 경제적인 공황상태를 불러왔으며, 절망적인 농촌사회의 문화적 병리현상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읍내에 나가보면 온통 소비향락적인 것들이 판을 친다. 어느새 '문화는 곧 소비와 향락'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도시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특히 결혼 적령기 남녀 성의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보니 건설한 농촌 총각들에게도 이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농촌이 갈수록 '유령의 마을'로 변해가

시작했다. 말하자면 '국제결혼'이란 이름으로 농촌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이다. 농산물의 세계화 바람이 제대로 불기도 전에 농촌과 농민의 '슬픈 세계화'가 먼저 시작된 것이다.

민족주의나 순혈주의를 주창할 생각은 없지만, 이는 참으로 불행하고도 슬픈 문화적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민족이나 국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결혼으로서 노동력과 성적 파트너 혹은 어떻게 해서든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농촌 총각의 4분의 1이 국제결혼을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법조칼럼



김정호

'열 사람의 법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오판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이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이와 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의 형사사건 실무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피고인에 대해 헌법과는 반대로 유죄추정의 원리에 따른 예단을 부지불식간에 가졌다가 죄 없는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

변호인의 선입견

할 뻔한 아찔한 경험이 필자에게 몇 차례 있음을 고백하면서 가장 최근의 사건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두 65세 정도의 여성이었다. 피고인은 재산적인 분쟁으로 고소인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고소인의 목살을 잡아 흔들고 고소인의 얼굴을 5회가량 때리다 드러나 있었고,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조서까지 합리적으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할 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인이나 증거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채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필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선입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고소인의 고소장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고,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조서까지 합리적으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할 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인이나 증거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채 기소된 상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설마 고소인이 자해해서 피해사건을 촬영하고 목격자도 조작했겠느냐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궁하면서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나를 짓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설득에 응하지 않자, 필자는 하는 수 없이 속는 셈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믿어주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는 의무감에서 변호를 시작했다.

이 사건 재판은 계속되는 목격자의 불출석으로 재판과정에서 실제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진통을 거듭하였고, 아주 이례적인 사실관계가 새롭게 발견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다가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폐쇄회로) 녹화내용을 지운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 피

기고



김종선

하늘·땅·물이 살아있는 녹색의 땅 전남의 산과 들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꿀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밀원식물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세력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고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해 꽃가루 수정을 하는 열매채소인 호박, 토마토, 멜론, 딸기 등과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일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꿀벌

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꿀벌은 여왕벌, 일벌, 수벌로 구성돼 언제나 가족처럼 집단생활을 하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첫째는 성실과 근면이다. 일벌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 지구 한바퀴의 거리를 비행하며 식물의 수정을 도와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둘째는 민주적 소통이다. 여왕벌은 알 낳을 자리와 분가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다양한 꿀짓과 페로몬으로 소통한다. 셋째 정결과 협동이다. 오염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청소하고 생태계 균형을 위해 서로 협동하며 생활한다.

넷째 희생정신이다. 늙은 일벌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생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벌침을 아낌없이 쓰고 생을 마감한다.

또한 꿀벌들은 인간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한다. 전 세계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는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6조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예전에는 산업적 가치로 꿀, 화분, 로열젤리, 밀랍 등과 같은 벌꿀 상품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프로폴리스, 봉독 등을 이용한 약용은 물론 화장품질과 화장품 등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없어지거나 붕괴 붕괴증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마다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남충병(비루파벌)'이라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75% 이상이 폐사되어 양봉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농업생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꿀벌의 폐사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 및 대책마

불법체류 외국인 무보험·무면허 운전 철저히 단속해야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그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여객선들의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점차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례중 하나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며칠 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장면

장면을 목격했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같다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타고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다 보니 당연히 면허가 없을뿐더러 보험조차 가입이 안 돼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불법체류자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00% 강제 출국이 되다 보니 이들이 경찰이나 출입국 직원들 앞에서 달아나는 것은 보통 불법 체류자들의 저항과는 차원이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도주 과정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단속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다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무보험, 무면허 차량 운전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지동

시설

정부, 무상급식 지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이 본래도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된 이후 점심시간이면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표정들이라고 한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도 이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고른 반찬이 나오는 데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나 이런 옛말이 됐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 학교를 읍 단위 이하 유치원, 초·중학교 전체, 학생 100명 이하 교고 등 모두 1002개 교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읍 단위 학생 100명 이하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인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중·고교에도 무상급식 확대가 어렵고, 친환경 급식 등 식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생·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중학교 1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과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란 이유 등을 들어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일부 보수단체들은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는 무상급식이 학생들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최선책으로서 정치적 이해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재원만 허더라도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2조 원이면 되지만 정부가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돈은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

정부 무상급식 지원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된 무상급식이 바로 국민적인 열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광주시 또 '교통사고 1위' 너무 부끄럽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2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국 16개 시·도 중 단연 최고였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도 579건으로 1위였다.

뿐만 아니라 광주는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4.89%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망자 수(4.13%), 부상자 수(8.20%) 등도 늘었다. 광주가 교통문화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음을 드러난 것이다. 이렇고도 문화·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는지 낯부끄러울 뿐이다.

정비가 안 된 구시가지가 많은 등 열악한 도로환경만으로 '교통사고 1위'의 원인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다. 교통 인프라 등 외적 요인보다는 시민들의 후진적인 교통의식이 더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속과 신호 위반, '꺼어들기',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그릇된 운전 습관이 광주를 '교통사고 1

위'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광주를 가장 운전하기 무서운 지역으로 손꼽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나 횡단 보도에서 우선 멈춤이라는 초보적인 교통 상식도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차량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불법 유턴과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는 차량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잘못된 교통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도 '사고 전권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2년 전부터 경찰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단체가 나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것이 방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면 광주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시와 경찰 등 당국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분단 66년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아직까지도 우리 뇌리에 뚜렷이 각인돼 있다. 감동과 환호의 기억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남북한 대결구도 완화와 평화통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2000년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모습이 그 첫 번째다. 남북 정상회담의 첫 만남이라 감격은 더했다. 약속과 포옹 장면을 보며 모두가 환호했다. 2박3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양측은 5개 항의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합의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2차 남북정상회담도 민족사에 기억될 상징적인 장면들을 남겼다.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처음으로 남북한대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선 것이 그것으로, '10·4선언' 서명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추구해왔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2차

해심함과 전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으로 6·15선언 이전으로 되돌려졌다. 일부에서는 '6·25전쟁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 일본에도이던 현 정부가 최근 남북간 비밀접촉에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자며 애걸하고, 돈봉투로 유혹했다"는 북한의 폭로가 나와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독일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와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 이후 9차례 회담을 통해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했고 20년만인 1990년 통일을 이뤄냈다.

북한의 공개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기 힘들지만 남북접촉은 현실거래가 아니라 정당당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거를 이벤트로 여겨선 더욱 안 된다. 남북 모두 화해와 협력의 '6·15선언' 서명에서 절정을 이뤘는 것이 먼저일 성싶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